

楊州郡議會第24回臨時會

새해부터 달라지는 法令・制度

楊 州 郡

文 化 公 報 室

문화공보실 업무 관련 법령

【공보계】

- 유선방송 관리법
- 사회단체 등록법

【문화관광계】

- 관광진흥법
- 문화재 보호법
- 공연법
- 지방문화사업 조성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전통사찰 보존법
- 도서관 진흥법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번호	문공-1		
법령명	유선방송 관리법	공포일 (시행일)	94. 1. 1
개 정 내 용	<p>1. 자가유선방송 허가</p> <p>2. 유선방송사업 허가시에 그 가입을 조건으로 하고있는 인.허가보증보험 요율 : 30/100[인.허가 보증보험 요율 = 가입자수×가입비(25,000원)×30/100]</p> <p>3. 유선방송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매년1회</p> <p>4. 중계유선방송의 녹음, 녹화 중계송신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방송 휴지시간에 한하여 1일 120분을 초과못함.</p> <p>5. 매월의 유선방송 사업결과를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고</p> <p>6. 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범위(시설사용료, 송신시간, 보증보험 가입, 정기검사등)에 한하여 방송을 송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유선방송 범위를 3회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재허가 대상 에서 제외</p>		
개 정 내 용	<p>1. 폐지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 영제2조. 제8조제1항 제3호. 제3조 및 제14조 제1항, 규칙 제2조)</p> <p>2. 10/100 (유선방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p> <p>3. 매3년 1회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p> <p>4. 폐지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 영제14조 제1항)</p> <p>5. 폐지 (유선방송관리법 제18조 제1항, 영제16조)</p> <p>6. 폐지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제3항)</p>		

번호	문공-2			
법 명 명		사회단체 등록	공포일 (시행일)	94. 3. 1
개 정 전	1. 명 칭 : 사회단체 등록 2. 사회단체의 회원수와 그 활동개황 보고 : 년2회			
개 정 내 용	1. 사회단체 신고 (사회단체등록법 제3조) 2. 폐지 (사회단체등록법 제6조 및 제3조 제3항)			

번호	문공 - 3			
시책.제도명	음반판매(대여)업자등에 행정처분제도 개선	시행일	'94 하반기	
종 전	<p>○ 음반판매(대여)업자가 폐업후 7일 이내 미신고시 직권 취소 및 과태료 부과로 영세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p> <p>○ 등록취소된 동일 장소에서의 신규등록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전 업주의 과실로 인한 후 업주의 신의 피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항 2)</p>			
개 선 내 용	<p>○ 과태료 부과제도 폐지</p> <p>○ 전 업주는 장소 이전하더라도 신규등록 불허</p>			

번호	문공 - 4		
시책.제도명	음반 및 비디오 대여업 등록 구비서류 감축 (신규 및 변경)	시행일	'94 상반기
종 전	<p>○ 등록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비서류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부담가중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률 제 6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5조)</p>		
개 선 내 용	<p>○ 이력서 감축</p>		

번호	문공 - 5		
시책.제도명	출판사.인쇄소의 등록신청 구비서류 감축	시행일	'94 상반기
종 전	<p>○ 등록신청시 필요한 신원조회용 신원진술서 5부를 작성.제출토록 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초래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 제 3조 제 1항)</p>		
개 선 내 용	<p>○ 신원조회를 생략하고 신원진술서를 신원증명서 1부로 대체</p>		

번호	문공 - 6		
시책.제도명	주지 취임 신고절차 간소화	시행일	'94. 1
종 전	<p>○ 전통사찰의 소재지가 산간오지로 시.군청과 원거리이며, 주지 취임시 매번 구비서류를 제출토록하던 것을 (전통사찰 보존업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p>		
게 선 내 용	<p>○ 현행 법령상의 주민등록초본 뿐만아니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서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로서 갈음</p>		

번호	문공 - 7			
시책.제도명	공연장 설치허가 구비서류 간소화	시행일	'94. 1	
종 전	<p>○ 허가관청의 관련 공부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까지 제출토록 함으로써 부담가중 (공연법 제 7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7조)</p>			
개 선 내 용	<p>○ 공부확인이 가능할 경우 대지.건물 등기부 등본 감축</p>			

課 務 内

번호	내무 - 1		
시책, 제도명	주민등록관련 시책, 제도	시행일	1993. 7 1
종 전	<p>1. (거주지유관 서비스제공) 주민등록 등, 초본등 주민등록관련서류의 발급, 열람이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만 가능함.</p> <p>2.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지. 파출소 경유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관할 지. 파출소의 확인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p> <p>3. (전출, 입 신고시 통. 리장 경유제) 전출, 입신고시 관할 통리반장의 확인날인을 받음.</p>		
개 선 내 용	<p>1. (거주지무관 서비스제공) 주민등록 등, 초본등 주민등록관련서류의 발급, 열람이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국내 어디서든지 가능한 전국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손실 절감.</p> <p>2.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지. 파출소 경유제 폐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관할 지. 파출소를 경유, 날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여 민원편익 도모.</p> <p>3. (전출, 입 신고시 통. 리장 경유제) 전출, 입신고시 관할 통리반장의 확인날인을 받지 않고 신거주지 천입신고만으로 주민등록 거주지이동신고가 완결됨</p>		

번호	내무-2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 (시행일)	1993. 12. 17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
개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제정 		
제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정이유 <p>국민의 통신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검열등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과 구현되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를 진전 시키려는 것임.</p>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든지 이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제한 조치, 즉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의 녹음, 청취를 하지 못하도록 함. 범죄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등 통신제한 조치는 검사 또는 군 검찰관이 지방법원, 지원 또는 보통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검사, 사법관의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로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정보수사 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로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 조치를 제한 할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함. 국가기관 외에 감청 설비를 제조, 판매, 소지,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에는 통신 제한 조치의 허가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번호	내무 - 3			
법령명	주민등록법	공포일 (시행일)	1993. 12. 27 (1994. 7. 1)	
개정	<p>1. 거주지 이동시 신고의무자가 전거주지를 전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출신고를, 전출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전출.입 2회신고제)</p> <p>2. 거주지 이동자의 복귀신고, 신거주지 변경신고의무제</p> <p>3.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통지를 받고도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함</p>			
개정 후	<p>1. 거주지 이동시 신고의무자가 전거주지를 전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전입 1회신고제)</p> <p>2. 복귀신고, 신거주지 변경신고의무제 폐지 (행정기관간 업무처리로 같음)</p> <p>3.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통지를 받고도 7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함(발급연장기간을 60일에서 7월로 연장)</p>			

財 務 課

번호	제부 -1			
법령명	1가구 2차량 지방세 중과규정 신설	공포일 (시행일)	94. 1. 1 (94. 1. 1)	
신설내용	<p>0. 관련 법규 : 지방세법 제 112조 제 5항 (취득세) 및 제 132조 2의 3항 (등록세)</p> <p>0. 신설 사유 :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완화 대책</p> <p>0. 중과 대상 세목 : 취득세, 등록세</p> <p>0. 대상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및 기타 승용차 (벤트 코란도 9인승 제외)</p> <p>0. 중과 세율 : 취득 등록세 산출 세액의 2배</p> <p>0. 중과세 배제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결혼한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 부모 봉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 결혼한 직계비속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다만, 1대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면허증사본으로 확인) · 일시적인 대.폐차를 위한 경우 - 취득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및 말소등록을 필할것. · 국가 유공자및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보철용 자동차 (2,000 〰 이하) 			
용				

번호	재무 -2			
법령명	자동차세 언납경우 감면규정 신설	공포일 (시행일)	94. 1. 1 (94. 1. 1)	
신설내용	<p>0. 관련 법규 : 지방세법 제 196조 6제 3항</p> <p>0. 신설 사유 : 차량의 증가로 세원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세의 체납액도 따라서 증가함에 따라 언납세 신고 차량에 대하여는 10%의 세액을 감면하여 주므로써 납세 의무자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체납세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함.</p> <p>0. 대상 차량 : 전 차량</p> <p>0. 감면 세율 : 연간 자동차 세액의 10%</p> <p>0. 언납 신고처 : 군재무과및 읍면 사무소 (년 세액 100,000원 이상의 차량)</p>			

번호	제무 - 3																		
법령명		지방세 증가산금 세율 변경	공포일 (시행일)	94. 1. 1.(94. 1. 1)															
개정안	<p>0. 지방세법 제 27조 1항및 제2항규정에 의하면 10만원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후</p> <p>0. 계속 체납이 될때에는 1월 경과시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음 (단, 가산금은 본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수 없음)</p>																		
개정내용	<p>0. 개정 법규 : 지방세법 제 27조의 2항</p> <p>0. 개정 사유 : 증가산금의 가산율을 시장 금리 수준으로 하고 최고 한도율을 상향 조정 하므로써 장기 체납을 방지코자 함.</p> <p>0. 개정 내용</p> <p>. 지방세법 제 27조 2항 내용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때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납기 경과후 5% 가산금 징수)에 규정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 신. 구 대비</p>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변 경 율</th><th>비 고</th></tr> <tr> <td>월 증가산금 율</td><td>2 %</td><td>1.2 %</td><td>0.8 % 감</td><td></td></tr> <tr> <td>최고 가산금율</td><td>25 %</td><td>77 %</td><td>52 % 증</td><td></td></tr> </table>				구 분	현 행	개 정	변 경 율	비 고	월 증가산금 율	2 %	1.2 %	0.8 % 감		최고 가산금율	25 %	77 %	52 % 증	
구 분	현 행	개 정	변 경 율	비 고															
월 증가산금 율	2 %	1.2 %	0.8 % 감																
최고 가산금율	25 %	77 %	52 % 증																

번호	제무 - 4		
법령명	담배 소비세율 신설	공포일 (시행일)	94. 1. 1. (94. 1. 1)
개정	<p>0. 지방세법 제229조 3항에 의하면 본조 1항에 의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음</p> <p>※ 법 제 229조 1항 규정 내용</p> <p>1. 흡연용 제조 담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종 : [킬런 20개비당 360원 200원이하 킬런 20개비당 40원 . 제 2종 : 파이프 담배 50그램당 700원 . 제 3종 : 엽킬런 50 그램당 700원 . 제 4종 : 각련 50그램당 800원 <p>2. 씹는 제조 담배 50그램당 800원</p> <p>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500원</p>		
개정내용	<p>0. 신설 법규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73조의 2</p> <p>0. 신설 내용 : 위와같이 본법 제 229조 3항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것을 급변에 시행령에 신설하므로써 실질적인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음</p> <p>0. 지방세법 시행령 제 173조의 2(조정세율)내용</p> <p>1. 흡연용 제조 담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종 [킬런 20개비당 460원 200원이하 킬런 20개비당 40원 . 제 2종 : 파이프 담배 50그램당 910원 . 제 3종 : 엽킬런 50그램당 2,600원 . 제 4종 : 각련 50그램당 910원 <p>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p> <p>3. 냄새 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p> <p>※ 담배 소비세 인상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원 이상 담배 - 현행 360원 에서 460원으로 (100원 인상) . 200원 이하 담배 - 현행대로 40원 		

번호	재무 - 5															
법령명	자경 농민및 경작농지 범위 확대	공포일 (시행일)	94. 1. 1. (94. 1. 1)													
개정안	<p>0. 지방세법 시행령 제 79조의 14의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와 직접 경작 농지의 기준은</p> <p>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 농지 (전.담.과수원.목장용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농지소재지와 서로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에 거주하는자로서 농지 소유자또는 농지 소유자의 동거가족중 한사람이상인 농업에만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 -</p> <p>직접 경작 농지 기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를 합하여 전.담.과수원은 3만 m^2 목장용지는 15만 m^2, 임야는 30만 m^2로 제한하고 있음</p>															
개정내용	<p>0. 위와같이 농지구입에 장애가 되던 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p> <p>0.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의 범위중 농지 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을 농지 소재지로 부터 농지 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 23조 2항 제 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20km)의 지역으로 하였고</p> <p>0. 직접경작 농지의 기준도 전.담.과수원의 경우 20만 m^2로 확대 개정 하였음.</p> <p>※ 신 . 구 대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자 경 농 민</td><td>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td><td>농지소재지로 부터 20 km 이내 지역</td><td>완 화</td></tr> <tr> <td>직 접 경 작 농 지 기 준</td><td>전. 담. 과수원의 경 우 3만 m^2로 제한</td><td>전. 담. 과수원의 경 우 20만 m^2로 제한</td><td>17만 m^2 증가</td></tr> </tbody> </table>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자 경 농 민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농지소재지로 부터 20 km 이내 지역	완 화	직 접 경 작 농 지 기 준	전. 담. 과수원의 경 우 3만 m^2 로 제한	전. 담. 과수원의 경 우 20만 m^2 로 제한	17만 m^2 증가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자 경 농 민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농지소재지로 부터 20 km 이내 지역	완 화													
직 접 경 작 농 지 기 준	전. 담. 과수원의 경 우 3만 m^2 로 제한	전. 담. 과수원의 경 우 20만 m^2 로 제한	17만 m^2 증가													

번호	제무 - 6			
법령명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 납부제 신설	공포일 (시행일)	94. 1. 1. (94. 1. 1)
개 정 안	<p>0. 지방세법 제 1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의 징수는 제 179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 징수방법에 의한 징수를 제외하고는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p> <p>※ 보통 징수 (지방세법 제 1조 1항 6호) : 세무 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p>			
	<p>0. 위와 같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운영하다 보니 세원 자료 통보 기관(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과의 업무협조상에 문제가 있고</p> <p>0. 간혹, 세원 자료가 너무늦게 통보되어 주민세를 부과하면 법인이 도산되어 체납세가 늘어나는등 세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p> <p>0. 등록세나 취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후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을 신설</p> <p>0. 신설 법규 : 지방세법 제 177조 2의 1항 1호</p> <p>0. 주요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결정또는 경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 불이행시 2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 고지 납부 			

번호	재무 - 7			
법령명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검인제도 개선	공포일 (시행일)	94. 1. 1. (94. 1. 1)
개정안	<p>0. 민원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할시 국토이용 관리법 제 21조 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를 득한후, 개별법인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제 3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로 부터 검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p>			
개정내용	<p>0. 신설 법규 : 국토이용 관리법 제 27조</p> <p>0. 신설 사유 : 위와 같이 한건의 민원사안을 가지고 개별법에 의하여 토지 거래 허가(신고)나 검인을 받도록 되어있음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인 손실을 주고있는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이 규정을 신설</p> <p>0. 법규 내용(국토이용관리법 제 27조) : 본 법에 의하여 토지 거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것으로 본다.</p>			

번호	제부 - 8			
법령명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대상지역 확대	공포일 (시행일)	94. 1. 1. (94. 1. 1)	
개 정 안	<p>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2조및 3조 규정에 의한 적용 지역및 대상물</p> <p>1. 읍면 지역의 전토지와 건물</p> <p>2. 시지역(인구 50만이상의 시는 제외)의 농지및 임야로 제한하고 있음</p> <p>※ 수복지역은 본법 적용지역및 대상에서 제외</p>			
개 정 내 용	<p>0. 관계 법규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및 3조</p> <p>0. 개정 사유 : 이와같이 적용지역및 대상에 있어 군지역은 등기상에 문제가 없으나 시외곽 지역의 자연 부락경우, 대부분의 대지가 미등기 또는 실제와 부합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있고 노후가옥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이 불가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할뿐 아니라, 일부시의 외곽지역 공시지가는 읍.면지역보다 낮은경우가 있어 읍면 지역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확대 적용</p> <p>0. 개정 내용 : 시지역(인구 50만이상의 시는 제외)의 개별 공시지가가 1㎡ 당 60,500원 (평당 200,000원) 이하의 모든 포함</p>			

번호	제무 - 9			
시책 . 제도명	지적측량 접수창구 운영	시행일	94. 1. 1.	
종 전	<p>0. 지적 측량(분할, 등록전환, 경계복원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측량하고자 하는 필지의 공부현황을 알기위하여 군청 민원실에서 지적공부를 발급받은후 지적측량 대행 법인인 대한 지적공사 사무실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p>			
개 선 내 용	<p>0. 설치사유: 이러한 민원인의 이중 방문과 지적공부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지적 측량 접수창구를 군 민원실에 설치운영코자 함.</p> <p>0. 설치 시기 : 94. 1. 1일</p> <p>0. 파견 직원 : 대한 지적공사 양주군 출장소 직원 (지적 측량업무에 경험이 많은 직원)</p> <p>0. 처리 대상 민원</p> <div style="margin-left: 20px;"> <p>지적 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 측량 (분할, 등록전환등)</p> <p>지적도면에 의한 지적 측량 (경계 복원, 현황등)</p> <p>기타 대민 업무</p> </div> <p>0. 기대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은 시간적 낭비 해소 . 민원처리 가능 여부의 신속한 파악 			

課 會 社

번호	사회 1		
법령명	의료보호법	시행일	1994. 1. 1
종 <			

번호	사회 2		
법령명	의료보험법	시행일	1994. 7. 1
종 전	<div> <input type="checkbox"/> 제10조 6항 (자격상실의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관할지역에서 퇴거한 때 자격상실 </div> <div> <input type="checkbox"/> 제30조 (요양급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80일 이내의 의료보험 혜택 </div> <div> <input type="checkbox"/> 제31조 (분만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인 배우자 혜택 </div>		
개 선 내 용	<div> <input type="checkbox"/> 제10조 6항 (자격상실의 시기)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관할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자격상실 ※ 전출입에서 거주개념으로 변경 </div> <div> <input type="checkbox"/> 제30조 (요양급여 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80일 이내, 단 65세 이상에 한하여 210일까지 연장 ※ 법정급여일수 제한적으로 연장 </div> <div> <input type="checkbox"/> 제31조 (분만급여)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 혜택 ※ 자녀 및 자부도 혜택을 받을수 있음 </div>		

번호	사회 3		
법령명	공중위생법	공포일 (시행일)	1993. 12. 27 (1994. 5. 28)
종전	<p><input type="checkbox"/> 제31조 (공동급수시설의 관리)</p>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의 음용에 제공되는 공동급수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도법에 의한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위생적인 공동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급수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관리 지도원을 두어야 한다.</p> <p>④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유지, 관리와 그 비용등이 필요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한다.</p>		
개선내용	<p><input type="checkbox"/> 제31조 삭제</p> <p><input type="checkbox"/> 향후관리 방향</p> <p>○ 시설물의 설치관리 : 건설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p> <p>○ 수질검사 실시 : 보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p> <p>[관련법규]</p> <p>○ 수도법제3조의9 : 공중위생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급수 시설을 이 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로 본다.</p>		

번호	사회 4																	
시책·제도명	영세민 생활보호	공포일 (시행일)	1994. 1. 1															
종 전	<div> <div>□ 관련법규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6조 1항</div> <div>○ '93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재산 및 소득)</div> <table border="1"> <tr> <th>구</th><th>분</th><th>1993년도</th><th>비고</th></tr> <tr> <td rowspan="2">생활보호 대상자</td><td>거택 보호자</td><td>재산 : 1,300만원이하 소득 : 13만원이하</td><td></td></tr> <tr> <td>자활 보호자</td><td>재산 : 1,300만원이하 소득 : 14만원이하</td><td></td></tr> <tr> <td colspan="2">의료부조자</td><td>재산 : 1,300만원이하 소득 : 15만원이하</td><td></td></tr> </table> <div>○ 거택보호대상자지원기준 : 쌀 (10kg), 보리쌀 (2.5kg), 부식비 (700원) 연료비 (일반용 450원, 월등용 225원), 장제비 (25만원)</div> </div>			구	분	1993년도	비고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자	재산 : 1,300만원이하 소득 : 13만원이하		자활 보호자	재산 : 1,300만원이하 소득 : 14만원이하		의료부조자		재산 : 1,300만원이하 소득 : 15만원이하	
구	분	1993년도	비고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자	재산 : 1,300만원이하 소득 : 13만원이하																
	자활 보호자	재산 : 1,300만원이하 소득 : 14만원이하																
의료부조자		재산 : 1,300만원이하 소득 : 15만원이하																
개 선 내 용	<div> <div>□ 관련법규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6조 1항</div> <div>○ '94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재산 및 소득)</div> <table border="1"> <tr> <th>구</th><th>분</th><th>1993년도</th><th>전년대비 증감</th></tr> <tr> <td rowspan="2">생활보호 대상자</td><td>거택 보호자</td><td>재산 : 1,700만원이하 소득 : 16만원이하</td><td>증 재산 400만원 증 소득 3만원</td></tr> <tr> <td>자활 보호자</td><td>재산 : 2,000만원이하 소득 : 17만원이하</td><td>증 재산 700만원 증 소득 3만원</td></tr> <tr> <td colspan="2">의료부조자</td><td>폐지</td><td></td></tr> </table> <div>○ '94년 거택보호대상자지원기준 증감현황</div> <div> . 부식비 (인/월) : 700원 → 820원 (증 120원) </div> <div> . 연료비 (가구/일) : <div> 일민용 (2장:365일) : 450원 → 540원 (증 90원) </div> <div> 월등용 (1장:182일) : 225원 → 270원 (증 50원) </div> </div> <div> . 장제비 (구당 : 25만원 → 30만원 (증 5만원) </div> <div> . 양곡지원 : '93년도와 동일 </div> </div>			구	분	1993년도	전년대비 증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자	재산 : 1,700만원이하 소득 : 16만원이하	증 재산 400만원 증 소득 3만원	자활 보호자	재산 : 2,000만원이하 소득 : 17만원이하	증 재산 700만원 증 소득 3만원	의료부조자		폐지	
구	분	1993년도	전년대비 증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자	재산 : 1,700만원이하 소득 : 16만원이하	증 재산 400만원 증 소득 3만원															
	자활 보호자	재산 : 2,000만원이하 소득 : 17만원이하	증 재산 700만원 증 소득 3만원															
의료부조자		폐지																

環 境 保 護 課

번호	환경-1			
법령명		수질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	공포일 (시행일)	93.12.27 (공포후6월)
개 정 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 승인을 감리단으로 부터 기술검토 받아야 함.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완료신고 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후가 아니면 사전조업을 할수없음. 사업자는 조업을 할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오염물질의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자는 환경처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배출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록한자는 벌금형에 처함. 			
개 정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의 기능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 기술 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경우 가동개시 신고후 즉시조업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 그시설을 확인하도록 함.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등 사업자가 해서는 않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만 벌칙을 적용함.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중 공공수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의 범위를 하천,호소로 정함. 오염물질의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자는 지정을 받던것을 등록제로 하고 측정 대행자에 대한 정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쟁 제한적 요소 폐쇄. 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과 직결되지 아니하는 측정기록의 보존위반 행위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함. 			

번호	환경-2			
법령명	대기환경보전법중 개정 법률	공포일 (시행일)	93.12.27 (공포후6월)	
개 정 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 승인을 환경기술 감리단으로 부터 기술검토 받아야 함.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완료신고 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후가 아니면 사전조업을 할수없음. 오염물질의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자는 환경처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환경처장관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수 있다. 배출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록한자는 벌금형에 처함. 			
개 선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의 기능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 기술 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경우 가동개시 신고후 즉시조업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 그시설을 확인하도록 함. 오염물질의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자는 지정을 받던것을 등록제로 하고 측정 대행자에 대한 정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쟁 제한적 요소 폐쇄. 운행차의 수시점검 개선명령 및 운행차 점검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사무로 전환함. 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과 직결되지 아니하는 측정기록의 보존위반 행위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함. 			

번호	환경-3		
법령명	소음진동 규제법중 개정법률	공포일 (시행일)	93.12.27 (공포후6월)
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환경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 승인을 환경기술 감리단으로 부터 기술검토 받아야 함. 3.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완료신고 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후가 아니면 사전조업을 할수없음. 4. 건설및 교통 소음진동의 규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환경처 장관의 승 얻어 규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생활소음 규제지역안의 이동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6. 오염물질의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자는 환경처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7. 소음.진동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록 한자는 벌금형에 처함. 		
개정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 업무로 전환하고 전용공업지역,공업단지등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2.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기술 감리 단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함. 3.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경우 가동개시 신고후 즉시조업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 그시설을 확인하도록 함. 4. 건설및 교통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등을 통 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5. 시도지사가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 안의 이동소음원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을 제한할 있도록 함. 6. 소음진동의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자는 지정을 받던것을 등록제로 하고 측정 대행자에 대한 정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쟁 제한적 요소 폐쇄. 7. 소음진동의 직접적인 배출과 직결되지 아니하는 측정기록의 보존위반 행위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함. 		

번호	환경-4			
법령명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중 개정령	공포일 (시행일)	93.12.31 (93.12.31)
개정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관광휴양지역. 2. 시설물 일부가 분할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소유된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3. 연료사용량을 산정할수 없거나 산정된 사용량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시설물 용도별 표준량을 적용 산정. 4. 부담금 산정 대상 시설물의 용도 분류는 29개 시설용도별 수질오염 유발개수 및 표준사용량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과 대상지역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과 온천법상의 온천지역 추가 2. 환경개선 부담금의 면제 대상중 분할 소유시설물의 경우 그 면제 기준을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로 상향조정 공동소유의 경우 1인소유 특분의 면적에 따라 등면제 기준을 적용토록 함. 3. 환경개선 부담금 일시 납부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 납부제도를 도입함(신설) 4. 사용량의 측정이 가능한 연료와 불가능한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용도단위로 구분하여 산정토록 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한 연료의 실사용량 반영 비율 높임. 5. 청정연료로의 대체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량을 알수 없는 연료가 2종인 경우 해당연료 계수를 산술 평균하여 적용토록 함(신설) 6. 시설물 현황조사 및 부담금 산정의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용도분류를 18개의 용도로 단순화 함. 			

번호	환경-5		
법령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공포일 (시행일)	93.11.25 (93.11.25)
개 정 전	<p>1. 유독물 영업(유독물 제조업, 유독물 판매업 또는 유독물 취급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신청인의 신원 증명서, 창고업법에 의한 창고업 허가증 사본(유독물을 보관, 지정하는 유독물 취급업의 경우)을 첨부하여야 했음.</p> <p>2. 유독물 수입자는 유독물 관리자를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유독물 판매업, 취급자는 유독물 관리자를 유독물 수입자에 준하거나 유독물 취급 기능사 2급에 준하는 자격 제한</p>		
개 정 내 용	<p>1. 불필요한 신원증명서, 창고업 허가증 사본 제출을 제외시켜 행정불편사항을 완화.</p> <p>2. 유독물 수입자가 갖추어야 할 유독물 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유독물 판매업, 취급자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유독물 판매업자, 취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유독물 관리자를 유독물 사업장에서 당해 유독물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유독물 관리협회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그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유독물 관리인의 범위를 확대 실질적으로 유독물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음.</p>		

번호	환경-6			
법령명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시행일)	93.12.27 (공포후 6월)	
개정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처 장관은 오수의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판단되는 특정 공산품에 대하여 판매 또는 사용제한 권고 2. 축산단지, 기타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하여 환경처 장관 승인 없이 설치 3.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자가설계 시공함 4.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며 체납시 가산금은 미부과 5. 특별 대책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권고 6. 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은 환경처 장관,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은 시·도지사에 등록 7.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시공업자가 분뇨 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등을 시공하는 경우 그 시공이 건설업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시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음. 			
개정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처 장관은 오수의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판단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판매의 사용금지 또한 제한을 명할수 있음. 2. 축산단지, 기타 밀집 지역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시 사전에 환경처장관의 승인 3.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까지 확대하여 자가설계, 시공함 4. 납부기한내에 축산폐수 배출부과금을 체납시 가산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함. 5.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 지역등의 수질오염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 축산시설중 일정 규모이상의 축산시설에 대하여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를 의무화 함 6.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정화조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업 경우 민간의 편의와 영업구역 확대를 위하여 그 등록자를 환경처 장관으로 일원화 함 7. 분뇨 처리시설등의 설계, 시공업자가 분뇨 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등을 시공하는 경우 그 시공이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더라도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아니하고 설계, 시공할 수 있도록 함. 			

번호	환경-7		
시책.제도명		재활용품 수거기관 변경	시행일 1994. 4. 1
종 			

家 庭 福 祉 課

번호			
법령명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공포일 (시행일)	1993.12.27 (1994.6.27)
개 정 전	<p>.의례업소 (예식장, 장의업소, 결혼상담소)의 영업을 하려고 하는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p> <p>.의례업소의 임대료 또는 수수료 가격은 시, 도지사가 고시한 최고 한도액을 초과할수 없음.</p>		
개 정 내 용	<p>.장의업의 영업 허가제를 폐지하여 장의용품을 누구나 자유롭게 취급할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례,식장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던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p> <p>.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종교단체,의료기관,학교,기업체및 사회단체등이 직접 그시설을 무료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비용만을 받고 가정의례 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례식장의 공급기반 확충 도모</p> <p>.영업자는 가정의례 영업에 있어서 임대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표시된 가격을 초과하여 요금 또는 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p> <p>.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함.</p> <p>.무신고 영업을 한자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함.</p>		

課 業 産

번호	산업 1		
법령명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개정	공포일 (시행일)	1993. 12. 14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농지소유상한 농가당 3ha까지 o 농지전용 신고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주택 : 1,500㎡까지 - 농업용시설 (축사등) : 3,300㎡까지 - 양어장, 양식장 : 3,300㎡까지 o 전용된 토지의 타목적 사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 5년 - 농업진흥지역 밖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농지소유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 10ha까지 (군수의 매매증명 발급시 20ha까지 가능) - 진흥지역 밖 : 3ha까지 o 농지전용 신고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주택 : 660㎡까지 1회로 제한 - 농업용시설 (축사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 3,300㎡까지 □ 농업진흥지역밖 : 7,000㎡까지 - 양어장, 양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 3,300㎡까지 □ 농업진흥지역밖 : 7,000㎡까지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기존공장의 3,300㎡이하의 증설 o 전용된 토지의 타목적 사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구분 없이 8년으로 연장 	

번호	산업 1												
시책 제도명	수입농산물 국내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요령	시행일	1994. 1. 1										
종 전		개 선 내 용											
<p>o 지침시행 : 수입농산물 국내유통시 원산지 표시요령</p> <p>o 내용 (원칙)</p> <p>- 최소단위 현물에 원산지(생산국) 표시하는것이 원칙</p> <p>- 원산지 표시의무</p> <p>생략 : 소비자가 수입물품을 인식할 수있도록 적격한 원산지 표시 후 판매하여야 함.</p> <p>(소비자에게 수입산임을 알릴 수있는 최대한의 방법만제시)</p>		<p>o 농림수산부 고시 (제 93-50) :수입농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 표시요령</p> <p>o 내용 (제3조 : 원산지 표시방법)</p> <p>-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되 원산지 : 국명</p> <p>제조국 : 국명 또는 ○○○산으로 표시하여야한다</p> <p>- 원산지 표시방법</p> <p>가. 원산지표시 활자크기</p> <table border="1"> <tr> <th>포장전면크기</th> <th>원시크기</th> </tr> <tr> <td>30cm이상×20cm이상 또는 600cm이상</td> <td>38 poing이상</td> </tr> <tr> <td>15cm이상×10cm이상 또는 150cm이상</td> <td>20 poing이상</td> </tr> <tr> <td>10cm이상× 5cm이상 또는 50cm이상</td> <td>12 poing이상</td> </tr> <tr> <td>10cm미만× 5cm미만 또는 50cm미만</td> <td>8 poing이상</td> </tr> </table> <p>나. 위치 : 포장전면 좌측상단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p> <p>다. 색도 : 포장지 바탕색과 구별할 수있는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p>		포장전면크기	원시크기	30cm이상×20cm이상 또는 600cm이상	38 poing이상	15cm이상×10cm이상 또는 150cm이상	20 poing이상	10cm이상× 5cm이상 또는 50cm이상	12 poing이상	10cm미만× 5cm미만 또는 50cm미만	8 poing이상
포장전면크기	원시크기												
30cm이상×20cm이상 또는 600cm이상	38 poing이상												
15cm이상×10cm이상 또는 150cm이상	20 poing이상												
10cm이상× 5cm이상 또는 50cm이상	12 poing이상												
10cm미만× 5cm미만 또는 50cm미만	8 poing이상												

번호	산업 2		
시책 제도명	양곡관련 회계제도 개편	시행일	1994. 1. 1
종 전		개 선 내 용	
<p>o 양곡관리기금</p> <p>- 자산의 승계</p> <p>- 부채의 승계</p> <p>o 세입징수</p> <p>- '93년산 양곡관리기금 양주군분입출 납 명령권의 수입징수액</p> <p>o 거래점계정의 명칭변경</p> <p>양곡관리기금양주군 일상경비출납공무원</p> <p>o 양곡관리기금의 폐지</p> <p>- '94. 1. 1. 폐지</p> <p>(단, 예산회계법에 의한 출납정리기한 은 '94. 1. 15일까지)</p>		<p>o 양곡증권정리기금</p> <p>- 양곡증권 정리기금의 자산으로 승계</p> <p>. 통일미 전량</p> <p>. '90년산 이전의 일반미(정부)</p> <p>※ 기타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자산으로 승계</p> <p>-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채로 승계</p> <p>. 양곡증권 원리금</p> <p>. 차관 양곡원리금중 상환 잔액</p> <p>※ 기타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의 부채로 승계</p> <p>- '93.12.31 현재 납입고지 아니한 징수 결정액과</p> <p>- 납입고지액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정리시 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고지액은 양 곡관리특별회계 양주군 분입 세입 징 수관이 징수결정 또는 납입고지한 것 으로 처리</p> <p>양곡증권정리기금 양주군일상경비출납공무원</p> <p>o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운영</p> <p>- '94. 1. 1부터</p>	

번호	산업 2		
시책 제도명	양곡관련 회계제도 개편	시행일	1994. 1. 1
종 전		개 선 내 용	
○ 경과조치 - 양곡관리금 양주군분입출납 명령관과 체결된 양곡의 보관 가공등 제반계약 사항		- 양곡증권정리기금 양주군분입출납명 관 양곡관리특별회계 양주군분입세 입징수관과 계약체결된 것으로 간주 처리	

課 設 建

건설기계관리법(중전의 중기 관리법)

(법률 제 4561호 개정 : 93. 6. 11. 시행 : 94. 1. 1.)

업 무 명	종 전	개 정
건설기계 등록 의무기간	30일	2개월
건설기계 임시운행기간	1개월	2개월
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허가제	신고제
건설기계 매매업	규정 없음	신설

건설기술 관리법

(법률 제 4562호 개정 : 93. 6. 11. 시행 : 94. 1. 1.)

업 무 명	종 전	개 정
품질시험 대상 사업	총공사비 10억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5,000㎡이상 또는 5층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5억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1㎡이상 건축공사
전면책임감리제	권장사항	의무부과(50억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10,000㎡이상 건축공사)
시공평가대상 공사	10억 이상	30억 이상

건설업법

(법률 제 4724호 개정 : 94. 1. 7. 시행 : 94. 7. 1.)

업 무 명	종 전	개 정
건설업 면허 발급 주기	3년	1년
건설업 면허 갱신 기간	3년	5년
입찰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및 고의, 과실로 인한 조찰공사	영인정지	면허취소 가능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015호 개정 : 93. 12. 6. 시행 : 93. 12. 6.)

업 무 명	종 전	개 정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도로)의 사용, 수익의 허가, 대부와 동허가의 갱신허가권	지방국도관리청	시,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 추진 중)
하천정비 기본계획 결정, 변경, 폐지 또는 취소등의 인가권 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변경, 폐지 또는 취소의 인가권	장 관	시, 도지사

농어촌 도로 정비법

(법률 제 4604호 개정 : 93. 12. 7. 시행 : 94. 1. 1.)

업 무 명	종 전	개 정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집용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도로의 점용시	점용료 부과	점용료 감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

(법률 제 4610호 개정 : 93. 12. 7. 시행 : 94. 1. 1.)

업 무 명	종 전	개 정
유도선 관리	시장, 군수	해상 : 해양경찰대 내수면 : 시장, 군수
승선객 재해대비 보험의 가입	권장사항	의무사항
유, 도선의 행정 처분시 청문제도	없음	신설

양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안”

업 무 명	종 전	개 정
도로불법점용 부당이득금 부과 기준	없 음	신 설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 구체화		
전액면제	공용 공익목적 비영리사업, 재해	차 동
1/2감면	없 음	공익사업 (전기 통신 가스공급사업)
부분감면	없 음	재해시 비율 준수 결정
부과기준 조정		
- 수도, 하수도등 지하 매설물	인근토지 가격의 3/100	전 액 제
- 광고탑, 광고판	인근토지 가격의 10/100	정 액 제

都 市 課

번호			
법령안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공포일 (시행일)	93. 12. 28 94. 1 . 1
개정전	○ 종전 전국토를 기능과 적성에 따라 10개 용도지역으로 구분 보전 위주로 관리 운영		
개정내용	<p>○ 용도지역을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등 5개로 축소,개편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녹지나 준보전임지등은 개발이 가능</p> <p>1. 도시지역: 정해진 구역, 지구등에 따라 개별법 적용 (예, 지방공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적용)</p> <p>2. 준도시지역: 대기오염배출시설은 고체 환산 연료사용량이 연간 220톤이상 • 폐수배출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 50톤이상 • 고체연료 200톤미만 폐수량 50톤미만이라도 특정수질, 대기유해 물질 배출시설은 금지 • 지정수량 100배 초과하는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주유취급소 제외) • 화약류 저장소</p> <p>3. 준농림지역: 면적 30, 000㎡이상의 토지형질변경 • 1일 폐수배출량 5, 000톤이상, 연료사용량 1, 000톤이상 • 1일 폐수량 50톤미만, 연료사용량 1, 000톤 미만이라도 특정폐수 대기 오염물질 폐수시설은 제외</p> <p>4. 농림지역 : 개별법에 의하여 처리 (예,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특별조치법 보전임지 -- 산림법)</p> <p>5.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별법에 특별히 규정한 지역은 개별법 적용 구역 지정이 없는 경우는 경미한 행위는 허용</p>		

번호			
법령안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시행일)	93. 12. 28 94. 1 . 1
개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 규제지역 ○ 토지거래 허가 처리기간 25일 ○ 가격심사 : 공시지가의 120%이내 ○ 임야매매증명, 농지매매증명 첨부 소유권이전 ○ 토지거래허가 후 검인계약 		
개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로 단축 ○ 가격심사제 폐지 ○ 임야매매증명 발급 생략 : 토지거래허가로 같음. ○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내 농지 : 농지매매증명 발급생략 - 토지거래허가로 같음 ○ 토지거래허가증 및 신고증 교부로 검인계약생략 ○ 벌칙강화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200만원이내 ○ 허가신청서 작성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기재 및 개발계획이용목적시 세부사업 계획서 제출 및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착수에정이어야함. ○ 농업진흥지역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93. 11. 24 시행) 		

번호				
법령명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제도 관련)	공포일 (시행일)	1993. 12. 31 (1994. 1. 1)	
개 정	<p>1971.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이용행위, 건축물의 신, 증축행위등을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생활환경등 일상생활에 불편 초래</p>			
개 정 내 용	<p>1. 주민생활 환경에 관한 사항</p> <p>(1).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증, 개축 허용범위등 확대</p> <p>○. 주택증, 개축 : 원주민 200㎡ (60평), 5년이상 거주 : 132㎡ (40평), 5년미만 및 외지인 100㎡ (30평)</p> <p>○. 부속건축물 : 66㎡ (20평) 단, 지하층에 건축하는 경우 100㎡ (30평)</p> <p>(2). 주택의 이축규제 완화</p> <p>2. 일상생활의 불편해소에 관한 사항</p> <p>(1). 일반음식점 허용기준 폐지등 생활편익시설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p> <p>(2). 농업협동조합의 사무실, 공공도서관, 유아원등 필수공공시설 설치허용</p> <p>(3). 나대지, 잡종지에 세차장 및 농기계수리소 설치허용등 기타 생활편익시설 설치허용</p> <p>3. 주민 소득증대 지원사항</p> <p>(1). 농, 축, 수산업용 시설 설치허용 및 확대</p> <p>○. 수경재배, 시설원예등을 위한 유리 또는 프라스틱구조의 온실설치 허용</p> <p>○. 축사를 1,000㎡ (300평)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허용</p> <p>○. 농업용 창고 농가당 기본적으로 100㎡ (30평)까지 설치 및 1만㎡ 초과시 초과면적의 1%비율로 추가설치 허용</p> <p>(2).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제한없이 허용</p> <p>(3). 기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항</p> <p>○. 농, 수, 축, 임업 및 마을공동으로 지역생산물의 저장, 가공, 포장, 판매을 위한 공동구판장 설치허용</p>			

번호				
법령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공포일 (시행일)	1994. 1. 7 1994. 4. 6	
개 정 전	<p>○. 5 개권역으로 분류 지정하여 권역별로 각종행위를 제한</p> <p>1. 이전촉진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정비가 필요한 지역</p> <p>2. 제한정비권역 : 이전촉진권역의 주변지역</p> <p>3. 개발유도권역 : 이전촉진권역으로부터의 인구 및 산업의 계획적인 유치로 그 개발의 유도가 필요한 지역</p> <p>4. 자연보전권역 : 자연자원의 보전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p> <p>5. 개발유보권역 : 도시화의 억제와 개발의 유보가 필요한 지역</p>			
개 정 내 용	<p>○. 3개권으로 분류 지정하여 권역별로 각종행위를 제한</p> <p>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p> <p>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p> <p>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p> <p>○. 과밀부담금 제도신설</p> <p>1.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건축시 건축비의 10/100 해당하는 부담금 부과</p> <p>2.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5/100 까지 조정 가능</p> <p>3. 부과권자 : 시, 도지사</p> <p>○. 수도권정비위원회 설치</p> <p>1. 수도권의 주요정책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p> <p>2. 심의사항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및 추진계획에 관한사항등을 심의</p>			

住 宅 課

번호	주택-1		
법령명	주택건설촉진법	공포일 (시행일)	'94. 1. 7 '94. 3. 1
개 정 전	<p>0 하자보수기간 : 3년 (공동주택관리령)</p> <p>0 감리제도 : 건축법에 의거 건축물 착공신고시 감리건축사를 사업주체가 선정 신고</p>		
개 정 내 용	<p>0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제도 신설</p> <p>.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전에 당해주택건설사업이 이법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p> <p>0 주택의 설계및 시공제도 신설</p> <p>.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설계하는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하고 주택을 시공하는자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p> <p>0 주택의 감리제도 신설</p> <p>.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때에는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자를 지정</p> <p>0 하자보수기간연장</p> <p>.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때에는 10년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부여</p> <p>0 안전진단실시 신설</p> <p>. 시장.군수는 10년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p>		

번호	주택- 2			
법령명	공동주택 관리령	공포일 (시행일)	'93. 12. 2	'93. 12. 2
개정전	<p>0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대표자의 자격 : 주택소유자</p> <p>0 관리업자에 의한 공동주택</p> <p>.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가 각각 관리 신고</p> <p>0 하자보증금 : 현금, 이행보합증권, 은행지급보증, 건설공제조합증권</p>			
개정내용	<p>0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자격요건 확대</p> <p>.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의 자격 : 소유자,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확대</p> <p>0 공동주택 관리신고 변경</p> <p>. 관리업자에 의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시에는 관리업자 신고 만 실시</p> <p>0 하자보증서 확대</p> <p>.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하자보수 보증서 추가</p> <p>0 경력소장의 주택관리사보 시험면제</p> <p>. '89. 12. 16 당시 공동주택관리소장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는 1차 시험 면제</p>			

民 防 衛 課

번호	민방 - 1		
법령명	민 방 위 기 본 법	공포일 (시행일)	1993. 12. 27 (1994. 1. 1)
개정내용	<p>○ 민방위집행계획 수립시 - 시·도 : 내부부장관 승인 - 시·군 : 도 지 사 승인</p> <p>○ 동원교육훈련중 사상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가료 및 보상</p> <p>○ 교육훈련불참자 및 교육훈련통지서 미전달자 - 전·평시를 막론하고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p> <p>○ 민방위대원 신고불이행 - 전·평시를 막론하고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p> <p>○ 동원명령불응자 -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p> <p>○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불복한자 -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p> <p>○ 민방위대장이 소대원에게 업무이외의업무를 행하게하거나, 소속대원의 관리행사를 방해한자 -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p>		
개정내용	<p>○ 민방위집행계획 수립시 - 시·도 : 내부부장관 보고 (법제 12조 제1항) - 시·군 : 도 지 사 보고 (법제 13조)</p> <p>○ 동원교육훈련중 사상자 - "재해휴업보상금지급" 추가 신설 (법제 23조의2)</p> <p>○ 교육훈련불참자 및 교육훈련통지서 미전달자 - 전시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법제 23조) - 평시 :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제 34조 제2호)</p>		

번호	민방 - 3																						
법령명	항 토 예 비 군 설 치 법	공포일 (시행일)	1993. 12. 31 (1994. 1. 1)																				
개	<p>○ 항토예비군 편성</p> <p>- 구 분 : 전시동원대비 제1전투군과, 항토방위 지역전투군으로 구분</p> <p>- 제 1 전투군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병 및 보충역</p> <p>- 군인사법상 계급별 정년 연령현황</p>																						
정	<table border="1"> <tr> <td>계 급</td> <td>대 령</td> <td>중 령</td> <td>소 령</td> <td>대위 — 소위</td> <td>준 위</td> <td>하사관</td> <td>병</td> </tr> <tr> <td>연 령</td> <td>53</td> <td>49</td> <td>45</td> <td>43</td> <td>53</td> <td>35</td> <td>30</td> </tr> </table> <p>(단, 하사관중 일반하사 및 보충역의 하사관은 33세 까지)</p>			계 급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 — 소위	준 위	하사관	병	연 령	53	49	45	43	53	35	30				
계 급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 — 소위	준 위	하사관	병																
연 령	53	49	45	43	53	35	30																
전	<p>- 지역전투군 (항토방위)</p> <p>· 36세이상의 하사관</p> <p>· 31세 - 33세 까지의병</p> <p>· 33세이하의 소집면제 보충역중 중퇴 - 국졸자, 고령사유장기 대기자</p>																						
개	<p>○ 항토예비군 편성</p> <p>- 제1전투군과 지역전투군의 구분없이 연차제로 관리</p> <p>· 장교, 준사관, 하사관,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p> <p>· 일반하사 및 병 : 전역 8 년차 까지</p> <p>- 군인사법상 계급별 정년연령 까지 현황</p>																						
정	<table border="1"> <tr> <td>계급</td> <td>대령</td> <td>중령</td> <td>소령</td> <td>대위—소위</td> <td>준위</td> <td>일등 상사</td> <td>이등 상사</td> <td>중사</td> <td>하사</td> </tr> <tr> <td>연령</td> <td>53</td> <td>49</td> <td>45</td> <td>43</td> <td>53</td> <td>53</td> <td>50</td> <td>45</td> <td>40</td> </tr> </table>			계급	대령	중령	소령	대위—소위	준위	일등 상사	이등 상사	중사	하사	연령	53	49	45	43	53	53	50	45	40
계급	대령	중령	소령	대위—소위	준위	일등 상사	이등 상사	중사	하사														
연령	53	49	45	43	53	53	50	45	40														
내	<p>- 편성제외 대상자 추가</p> <p>· 중전 지역전투군편성대상자인 중퇴-국졸,고령사유 장기 대기 소집면제자</p>																						
용	<p>· 군복무 필자중 학력이 중졸 미만자</p>																						

번호	민방 - 2			
법령명	소 방 법	공포일 (시행일)	1993. 12. 27 (1994. 6. 27)	
개 정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장소 (호텔의료기관, 고층빌딩등)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경우 처벌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을위한 지시나 명령없이 1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점검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관서에서 직접 실시 ○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설계를 건축설계와 병행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공사감리는 소방관서 (미설치 시군은 시장, 군수)에서 직접 실시 			
개 정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장소 (호텔의료기관, 고층빌딩등)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경우 처벌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관서장이 그 시정을 명하고, 위반한경우에 한하여 처벌 (법제 11조 제 3 항 및 제 12조 제 1호) ○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점검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등을 실시 (법제 17조의 2) ○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시설에대한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록제 실시로 특수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를 건축 설계와 별도로 실시하며 동시설에 대한 공사감리를 감리업자가 별도로 실시후 건축사 및 소방관서에 통보토록함 (법제 65조) ※ 특수시설에 대한 규모및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해질것임 			

번호	민방 - 4			
법령명	병역법	공포일 (시행일)	1993. 12. 31 (1994. 1. 1)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국민역 자원 관리 : 호적에 근거하여 본적지에서 관리 ○ 해군 및 공군병의 복무기간 : 3년 ○ 방위소집 제도 : 18개월복무 ○ 독자 및 생계곤란자 군 복무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이상인독자, 2대이상인독자는 보충역 편입 (6 개월 복무) - 생계곤란사유자는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 면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국민역 자원 관리 : 주민등록에 근거하여 거주지에서 관리하며 자원조사는 거주지 읍·면 동장이하고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은 거주지 지방 병무청장이 하도록 함 ○ 해군 및 공군병의 복무기간 단축 : 2년 6개월 (6개월 단축) ○ 상근예비역 제도 신설 : 본인의 지원 또는 징집에의하여 현역병으로 1년 복무한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항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무하도록 병역법 신설 (법 21조, 23조) ○ 공익 근무요원 소집제도 신설 (95. 1. 10이후실시) :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방위소집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목적업무를 2년 8개월 이내로 복무하도록 병역법 신설 (법 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체육분야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은 3년으로함 (법 30조) ※ 방위소집제도 폐지에 따라 중전의 규정에의한 방위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1994. 12. 31 까지는 방위소집을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 및 생계 곤란자 군복무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에 대한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단축제도 폐지 - 생계곤란 사유자에 대하여 방위소집 면제하던것을 제 2 국민역으로 편입 			
용				

保 健 所

번호	보건 1		
법령명	전염병 예방법 개정	공포일 (시행일)	1993.12.27 (1994.6.28)
개정	<p>0. 제 2조(전염병의 종류) 제1종 콜레라외 8종, 제2종 폴리오 외 13종, 제3종 결핵 외 2종</p> <p>0. 제31조(환자의 출입금지) 전염병 환자는 공중의 집합장소및 전염병이 전파될 우려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p> <p>0. 제32조(환자의 취학금지) 전염병 환자는 취학 할 수 없다.</p> <p>0. 제34조(전염병환자와 그사체의 이동금지) 전염병 환자와 그 사체는 특별시장, 시장, 군수 허가 없이 이동할 수 없다.</p> <p>0. 제35조(환자 시체의 화장) 제1종 전염병 환자의 시체는 화장하여야 한다.</p> <p>0. 제36조(전염병 환자사체의 이장 개장금지) 1종전염병 환자의 사체를 매장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는한 매장후 3년이 경과하기전에는 개장할 수 없다.</p>		
정			
전			
개	<p>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법정 전염병의 종류를 조정하고 각종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며,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것임.</p>		
정	<p>0. 제1종 전염병중 두창을 삭제하고 제2종 전염병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랩토스피라병및 쯔쯔가무시병을 신설하는등 법정전염병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p>		
내	<p>0. 전염병환자의 공중집합소등에 대한 출입금지, 취학금지, 이동금지, 동시체의 화장의무, 이장 및 개장금지등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함.</p>		
용	<p>0.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소독업자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명시함.</p> <p>0. 행정처분시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p>		

번호	보건 2		
법령명	결핵 예방법 개정	공포일 (시행일)	1993.12.27 (1994.6.28)
개정	<p>0. 제12조(출생아에 대한 결핵예방접종)신생아의 출생후 1년이내에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한다.</p> <p>0. 제20조(의사의 보고의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병원 관리자는 결핵환자의 발생과 사망에 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p> <p>0. 제23조(환자의 취업제한)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접객업 기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 종사 금지</p> <p>0. 제26조(재소중인 환자의 격리)재소자 중 결핵환자로 판단된 자는 격리 수용하여야 한다.</p> <p>0. 제41.43조(건강진단수검)건강진단 위반자등에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p>		
내용	<p>생활 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결핵예방접종과 비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 방법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결핵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p> <p>0. 신생아는 출생후 1년내에 반드시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의료기관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p> <p>0. 의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관리에 관한 협조의무와 결핵환자등의 발생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함.</p> <p>0.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완화하여 비전염성 환자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핵환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정지된 자는 전염성이 소실되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복직허용의무를 부과함.</p> <p>0. 교도소에 재소중인 결핵환자중 전염성 환자에 대하여 격리수용하도록 함.</p> <p>0. 건강진단수검의무 위반자등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타 벌금액을 현실화 함.</p>		